2026년도 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순경 공채 >

- [필수2] 해양경찰학개론(01), 형사법(12)
- [선택1] 해사법규(04), 헌법(05)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인터폴(INTERPOL)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② 청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목적으로 발행
   ③ 녹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④ 흑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2.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관장한다.
   ④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3. 다음 <보기>의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근무 종류에 따른 비상근무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는 "병(丙)호" 비상보다 낮은 단계로, 적 활동징후 및 취약시기를 고려 적정수준의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해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① 해상경계강화
② 해상경비강화
③ 해상치안강화
④ 정(丁)호

4.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의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다.
   ② 비상소집 전화 응소는 1시간 내 응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비상소집은 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한다.
   ④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5. 다음 중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중앙구조본부의 구성과 그 담당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조정관 : 중앙구조본부 운영 요원 지휘·감독
   ② 현장대응부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의 사고수습 진행상황 확인
   ③ 대응계획부 : 재난 상황 분석, 대응활동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④ 자원지원부 : 수색구조 현장 인력 동원 및 물자 지원

6.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 운반선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③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안전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

7. 다음 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②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④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8.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처분"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9.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구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10. 다음 중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 장비관리국장
② 파출소 및 출장소 : 파출소장
③ 지방해양경찰청 : 경비(안전)과장
④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행정지원팀장

11.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한다.
② 진압해양경찰은 사전에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행정해양경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③ 평시해양경찰은 일상적 상태에서 해양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④ 해양경찰의 수단적 이념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있다.

12.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군참모총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대테러특공대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의 임무를 수행한다.

13.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간적인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어업자원보호법」의 제정
㉡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발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신설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③ 경찰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④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7년이 지난 사람

15.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③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16.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②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③ 선박교통관제 업무
④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조치

17.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상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5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8.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소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외국선박의 잠수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7일 전까지 (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③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명령서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20.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가장 옳은 것은? (총톤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함)
① 수상오토바이
② 총톤수 30톤의 모터보트
③ 총톤수 25톤의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④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의 고무보트

형사법

1.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한다.

②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행위반가치론으로 등장한다.

③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④ 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2.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③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3. 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형법」 제288조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 제289조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③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된다.

④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동법 제308조의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고, 동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형사미성년자인가의 판단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실제 연령의 입증이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다.

④ 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 면책된다.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②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④ X 회사의 甲은 A, B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Y 회사의 乙은 B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Z 회사의 丙은 C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A, B 살균제와 C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4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甲, 乙, 丙에게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9. 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④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③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④ 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11.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②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12.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13.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14.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15. 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은 乙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8. 22. 10: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 24. 10:00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10:00에 乙을 구속하려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20:00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乙을 석방하였고, 9. 24.에 서면으로 乙의 석방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1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③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18.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해사법규

1.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시 고려되는 수역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②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④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2.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수역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②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③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④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4.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연해구역에서 부선을 선미 예인하는 예인선의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다음 중 「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②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이다.
   ③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④ 길이 12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u>않은</u> 것은?
   ① 항만용역업
   ② 항만하역사업
   ③ 검량사업
   ④ 감정사업

7.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② 여객 정원이 15명인 한국선박(총톤수 4톤)은 선박직원법을 적용한다.
③ 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④ 1급 항해사(상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8.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판결(判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뜬 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0.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대륙붕의 탐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면허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일반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3.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②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③ 해양과학 조사
④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1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위험화물운송선박 제외)의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화암추, 범월갑, 생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으로 하는 기점으로 총 23개의 기점이 있다.
②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선박이 무해통항을 위반하여 관계 당국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상형 체험활동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②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18.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
②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③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④ 무동력어선

20. 다음 <보기>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가　)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　나　)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　다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나)	(다)
①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해운대리점업
②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해상여객 운송사업
③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해운대리점업
④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해상여객 운송사업

헌법

1. 다음 중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다음 중 헌법제도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② 신뢰보호원칙이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규정함과 아울러 선거권,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직접민주제 방식 중 하나인 국민투표제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기도 한다.

3. 다음 중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은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개별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헌법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③ 헌법 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④ 헌법 전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헌법규범의 단계적 구조 중에서 최상위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4. 다음 중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효력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구속하나 영조물의 설치·관리, 예산재원의 조달, 공공수요의 충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작용 및 영리경제적 활동 등 국고작용까지는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기본권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③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④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5. 다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완전히 출입을 통제하며 통행을 제지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고지 의무 대상은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다.

③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 될 자에게도 보장되나,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진술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7. 다음 중 주거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②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의 정당한 이유란 일정한 범죄에 대한 혐의의 존재와 그것을 수사하기 위한 증거물건의 발견이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증이 수사기관에 의해 주관적으로 형성되면 족하다.

③ 헌법 제12조제3항과 달리 영장주의의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8. 다음 중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형법」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현하고 있거나 실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통신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며, 통신의 자유를 제한법률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 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의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같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④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10.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특허쟁송에서 특허청의 심판 후 법관의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하도록 한 「특허법」 규정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④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11.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12. 다음 <보기> 중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

13. 다음 중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②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④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다음 중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공시기능을 통하여 주택 양수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16. 다음 중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 지침)'는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병원·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사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7. 다음 중 생명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초기배아는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으며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된다.

③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자기낙태죄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18. 다음 중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 다음 중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농협중앙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 다음 중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 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 그 허용 여부를 주무 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인 간 기본권 충돌의 경우 입법자에 의한 규제와 개입은 개별 기본권 주체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방식으로 흔하게 나타나며, 근로계약이 사적 계약관계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